

# 석탄 액화연료 생산 활성화 총력

## 미국, 석탄기업 정부조달법 개정 로비 ... 국방부와 장기공급계약 추진

미국 석탄기업들이 석탄액화연료 생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달법 개정 로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석탄기업들이 현재 최장 5년으로 규정된 계약기간을 25년까지 허용토록 정부조달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군이 일정가격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석탄액화연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군사용 연료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공군도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탄기업들이 군사용 연료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로 국방부와 석탄액화연료 장기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장기공급계약만 성사시키면 석탄액화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탄기업 관계자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상만 유지되면 석탄액화가스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석탄기업인 피바디에너지의 그레그 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석탄액화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 2006년 12억톤 규모였던 석탄수요량이 2030년까지 연간 22억톤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탄액화연료는 하루 8만배럴 수준의 생산공장 건설 규모의 정유시설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생산과정에서 정유시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석탄기업들이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염 물질 처리시설을 갖추려면 수억달러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서 55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만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갤런의 석탄액화연료를 생산하는데 5-7갤런의 용수가 필요한 것도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어 중국도 최근 과도한 물 소비량 때문에 석탄액화연료 생산계획을 축소할 바 있다.

석탄기업들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군이 엄청난 비용과 환경오염 부담을 지면서까지 석탄액화연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자체 원유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일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2>